

#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0년 6월 1차 (2020.6.1~ 6.15)



## 주요 현안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청소년 사이버 상담 강화 예산 증액

☑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기능 강화 예산(875백만원)과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온라인상담 예산(218백만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힘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전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4시간 상시 상담(02-735-8994)체계 구축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온라인상담(사이버 아웃리치) 강화

####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6.03.]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059](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059)

###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 가능
-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추가

####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6.09.]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063](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063)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성인지적인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

☑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인지적인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험’을 주제로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주최한 장관급 화상회의에 참가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성인지적인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함

###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6.09.]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68](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68)

##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과 가족 위기 진단 및 대응 방안 모색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성노동, 돌봄, 젠더폭력 분야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기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함.

###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6.10.]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69](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69)

##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젠더 폭력· 안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2020-04-28	성범죄로 인한 처벌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을 금지하여 교원의 도덕성 제고(안 제21조의2 신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	2020-05-04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함. 또한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 도입(안 제5조의2 신설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2020-05-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보호 및 피의자의 신상공개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제8조).

젠더 폭력· 안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2020- 05-0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공유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운영한 자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따른 처벌과 동일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용어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행위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제공을 매개하는 운영 활동을 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2조제5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3인)	2020- 06-01	근로자의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4항제3호 신설).
가족· 돌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2020- 06-0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주거와 교육, 취업뿐만 아니라 건강, 안전 부문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하고, 보호종료 연령 초과 시 자의에 의해 보호종료연령을 연장 허용(안 16조제1항 등)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8인)	2020- 06-01	사회서비스 품질을 견인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 확충에 따라 해당 국공립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및 민간시설에 대한 선도적 운영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절차, 운영 등과 관련한 근거 마련(안 제1조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2020- 06-04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2020- 06-04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나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 등이 휴교·휴원하는 경우 또는 원생의 결석에도 불구하고 출석인정특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격리 또는 휴원 등의 기간 내에서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2조의5, 제37조제2항제9호 및 제39조제2항제9호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2020- 06-05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9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2020- 06-10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등·하원 시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도록 조치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여 영유아 안전관리 및 보호 강화(안 제33조의3 신설)

젠더 폭력· 안전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20- 06-01	현행법상 스토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뿐이며, 이외에는 스토키를 막을 수단이 전혀 없음. 따라서 스토키를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남인순의원 등 18인)	2020- 06-01	일정한 행위를 스토키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키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스토키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2020- 06-02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배치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진술조력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양질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환경 조성(안 제35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2020- 06-02	사업주에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직장 내 간음 및 추행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안 제14조의3 신설, 안 제37조제2항, 안 제39조제3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20인)	2020- 06-08	성범죄로 인한 처벌 받은 사람 또는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 제고(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9인)	2020- 06-08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엔에이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반인륜범죄인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그대로 둔다면 일정기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0조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9인)	2020- 06-08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1조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2020- 06-09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여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의지 대변(안 제4조 및 제5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6인)	2020- 06-10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 확인업무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안 제7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젠더 폭력· 안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33인)	2020- 06-11	<p>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권유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하거나 성적 목적의 유인·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p> <p>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구체화하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및 제13조제2항 등).</p>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5인)	2020- 06-11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올림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 반영(안 제4조 및 제5조 등)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의원 등 11인)	2020- 06-03	주거안정이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정책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및 주택구입비용·전세자금 지원 등의 주거안정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 1주년 토론회	6.1	여성신문	양성평등전담부서 출범 1년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마련... 권한은 한계"	<a href="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460">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460</a>
"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	06.11	조선예류	코로나로 직장 쉬거나 관두는 여성 급증... "돌봄 공공성 강화해야"	<a href="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3002.html">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3002.html</a>
	06.11	경향신문	최미진 "경제위기 때마다 여성 먼저 하고 비정규직 비율 높은 게 근본 문제"	<a href="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6112054005&amp;code=920100">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6112054005&amp;code=920100</a>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06.03.	연합뉴스	온라인 타자게임 대항전서 순위 오른 여대에 쏟아진 혐오	장미혜 선임연구위원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006021722000047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2006021722000047input=1195m</a>
06.03.	한겨레	가임기 여성만 신혼부부?...정부 '성차별적' 기준 왜 안바뀌나	김경희 선임연구위원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47696.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47696.html</a>
06.08	여성신문	[여성논단] 성평등·성교육 통합 교육,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a href="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770">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770</a>

유관기관 연구동향



빈곤가정 영유아 통합지원 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국내·외 빈곤아동 통합지원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빈곤가정 영유아 통합지원 정책 및 서비스 개선·강화 방안 제시

참고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06.09.]  
[http://www.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33&editMode=ADD&board\\_idx=35680&manage\\_idx=4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viewPage=1&search\\_type=title&yearData=%25&search\\_text=](http://www.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33&editMode=ADD&board_idx=35680&manage_idx=4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viewPage=1&search_type=title&yearData=%25&search_text=)